

人材養成

성기수(KIST시스템공학연구소 연구위원)
매일경제 93.2.6 『매경춘추』

21세기의 선진 한국을 생각할 때 가장 염려되는 것이 현재의 빈약한 우리 교육제도이다.

올림픽 세계4위, 기능올림픽 연속 세계1위, 무역규모 12위, 초중학교생 수학과과학퀴즈 세계 1위, 과학기술분야 유명학술회지논문수 38위가 말해주듯이 우리 한민족은 우수한 자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심히 불균형된 방향으로 발휘되어 왔다. 과학기술분야가 38위라는 것은 우리의 교육, 그중에서도 특히 대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학들은 정원통제 입시관리 총학장취임 승인 교수재임명제 등 획일적 정부통제로 인해 그 자율성이 억압되어 왔는데 민주화가 달성된 이 시점에서 教育立國을 위한 최우선 중요과제는 대학의 자율성 회복이다. 대학과 연구소들에 대한 정부의 미시적 통제는 지양하고 예산지원을 과감히 하되 그 우선순위를 국방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냉전이 경제전으로 바뀐 국제여건과 모든 분야에서 자동화 정보화로 인한 생산성 혁명이 급진전되는 기술환경에서 한민족이 체면을 유지하고 살아남는 길은 보다 많은 영토가 아니라 보다 많은 특허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영유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주요 전장은 연구소와 대학이다. 자율성 회복으로 대학이 활성화되면 높은 교육열로 인해 입시준비학원 교액가정교사 등으로 흐르던 비정상적 자금도 대학으로 모이게 된다. 그리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시설 기숙사 도서관의 건축붐이 현재의 고층아파트 오피스 빌딩 백화점 호텔 건축 붐을 대신케 될 것이다. 교수진은 지금의 3배 이상으로 질과 양 모두 보장되어 현재의 과중한 교수 1인당 학생수와 강의시간이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될 것이다.

학문의 전당, 기술의 산실인 대학과 연구소들을 국운을 걸고 육성하되 동시에 선진국 대학에 적어도 경쟁국보다는 인구비례로 많은 유학생수를 유지하도록 장려하여 기술영유권 확보경쟁에 대비한 첨단기술과 시장개척의 첨병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미국 일본 EC에 각 7만

명, 즉 미국의 경우 지금의 3배, 일본과 EC의 경우 지금의 10배로 더 많은 젊은이들을 내보내는 것을 뜻한다.